

GAFSC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News Letter

2017년 2분기

Vol. 11



국가회계 동향

재정통계 동향

특집

센터 동향

세미나

공지사항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Contents

1. 국가회계 동향

- ▶ 국가회계 국내동향
- ▶ 국가회계 해외동향

2. 재정통계 동향

- ▶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 ▶ 2016회계연도 공기업 결산결과 분석

3. 특집

- ▶ 국가회계예규 개선 로드맵 연구용역 결과 보고
- ▶ OECD 보고서

4. 센터 동향

- ▶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방안 연구·분석」 연구용역
- ▶ 『국가부채의 측정과 보고의 비교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중간보고
- ▶ OECD 공동연구 현지 중간보고 및 심층조사 참관 후기
- ▶ 2016회계연도 회계·결산지원단 간담회 개최

5. 세미나

- ▶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 ▶ 한국정부회계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국가회계 연구분야 발표
- ▶ 한국회계학회 2017 하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세션’ 결과

6. 공지사항

-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7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 ▶ 뉴스레터 이용 안내
-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01

국가회계 동향

1 국가회계 국내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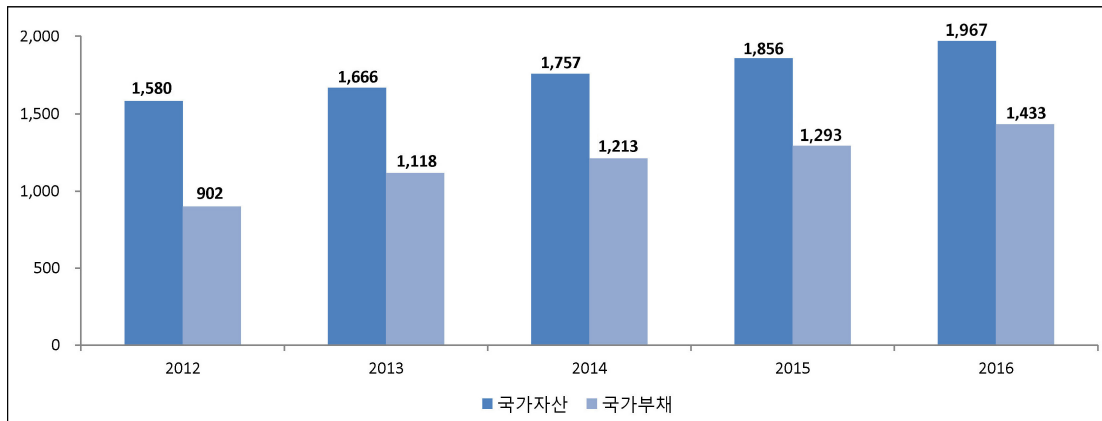
가.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2017년 5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재무결산 결과 2016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회계·기금을 통합한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기금 여유자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10.6조원 증가한 1,966.8조원, 부채는 할인율의 하락 등에 기인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9.9조원 증가한 1,433.1조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33.7조원이다.

한편, 「연금회계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퇴직수당충당부채 산정 방식 변경으로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정상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 장기충당부채가 8조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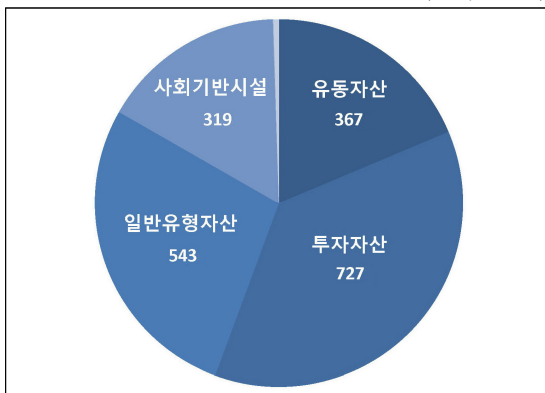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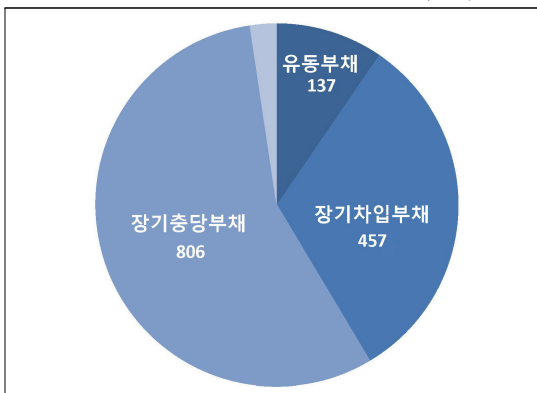
〈국가자산의 구성〉

(단위 : 조원)



〈국가부채의 구성〉

(단위 : 조원)



2016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1,966.8조원으로 전년 대비 110.6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자산 14.8조원, 투자자산 62.4조원, 일반유형자산 20.1조원, 사회기반시설 12.0조원, 무형자산 0.1조원, 기타비유동자산 1.2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말 현재 자산 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36.9%와 27.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유동자산 18.7% 순이다.

2016년 말 현재 자산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189.4조원, 현금및현금성 자산 49.8조원, 단기금융상품 45.1조원 등 총 367.4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497.1조원, 장기대여금 132.8조원 등 총 727.2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347.0조원, 건물 62.1조원 등 총 543.2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188.6조원, 철도 38.7조원 등 총 318.6조원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1.1조원 등 총 1.3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장기미수채권 5.1조원 등 총 9.1조원이다.

2016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1,43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39.9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차입부채 35.5조원, 장기충당부채 98.0조원, 유동부채 4.1조원, 기타비유동부채 2.3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6.2%, 장기차입부채는 31.9%, 유동부채는 9.6%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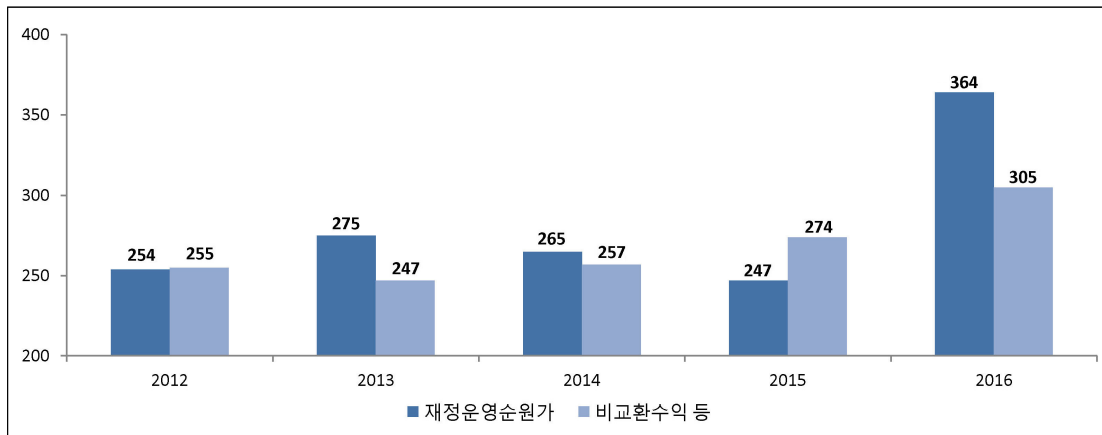
2016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61.2조원,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6.4조원 등 총 136.9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440.0조원, 공채(자기공채 차감) 12.8조원 등 총 456.5조원이다. 장기충당부채 805.9조원은 연금충당부채 752.6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 44.4조원, 기타 8.9조원(보증충당부채 5.1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유동부채

33.8조원은 장기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23.0조원, 장기미지급금 10.8조원이다.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순원가는 자산재평가손실과 연금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116.2조원이 증가한 363.5조원이다. 국세수익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비교환수익 등은 304.9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58.6조원이다.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단위 : 조원)



2 국가회계 해외동향

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¹⁾)

① IPSASB, 『자문보고서, 공공부문의 유산에 관한 재무보고』 발표

2017년 4월 11일 IPSASB는 『자문보고서, 공공부문의 유산에 관한 재무보고』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자문보고서는 유산 항목을 ‘희소성과 중요성에 기인하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효익을 보존하기 위해 영구히 보유할 의도가 있는 항목’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유산 항목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유산 항목이 재무보고 목적상 자산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님
- 유산 항목이 개념체계의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재정상태표에 인식되어야 함
- 많은 경우 유산자산에 대해 화폐가치를 매길 수 있음

자문보고서는 또한 다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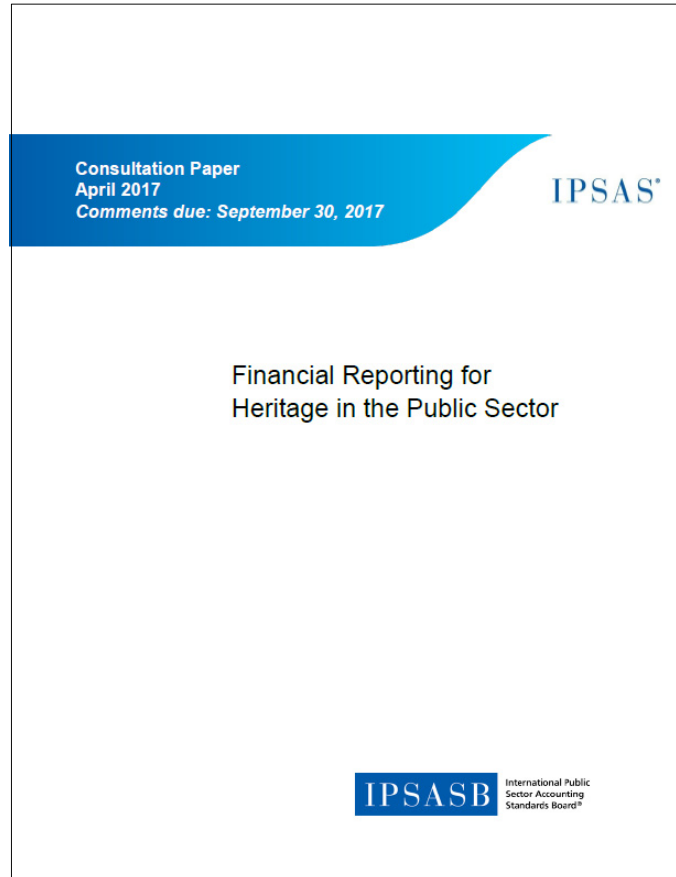
- 유산자산의 최초 측정 및 후속 측정
- 유산의 보존의무가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실체의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상 유산 관련 정보의 표시

Ian Carruthers IPSASB 위원장은 “지금은 유산 항목에 대해 다양한 재무보고 관습이 있어 공공부문 실체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GPFRs) 간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많은 공공부문 실체가 유산과 관련된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번 자문보고서는 회계책임성 및 해당 분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무보고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평했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7-04/ipsasb-launches-consultation-heritage-reporting>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IPSASB의 동 자문보고서의 Preliminary View와 Specific Matters for Comment에 대한 답변 및 의견을 작성하여 2017년 6월 23일에 IPSASB 측에 제출하였다.
(자문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참조)

1) 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IPSASB 자문보고서 『공공부문의 유산에 관한 재무보고』〉

나. 미국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GASB²⁾)

① GASB 기준서 설명을 위한 두 가지의 실무적용지침 발표

2017년 5월 9일 GASB는 GASB 기준서들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설명·보충하기 위한 목적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새로운 실무적용지침 두 개를 발표했다.

첫 번째 실무적용지침 No. 2017-1, 『실무적용지침에 대한 업데이트 - 2017』은 광범위한 실무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연금, 현금흐름표, 재무보고실체, 투자자산, 외부투자품, 자금배정액 및 세금

2) GASB: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미국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

감면액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관한 새로운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실무적용지침은 또한 기존에 발행된 실무적용지침에 대한 개정사항도 담고 있다.

두 번째 실무적용지침 No. 2017-2, 『연금제도 이외의 퇴직후급여제도의 재무보고』는 연금제도 이외의 퇴직후급여제도에 관한 150개 이상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연금제도 이외의 퇴직후급여 제도는 기타퇴직후급여제도(OPEB plans)라고도 불리며, 그 제도에서 관리하는 급여(주로 퇴직자 의료 보험)는 기타퇴직후급여(OPEB)라고 한다.

※ GASB는 지난 2016년 10월 18일에 실무적용지침 『연금제도 이외의 퇴직후급여제도의 재무보고』의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GASB 실무적용지침에 담긴 질문과 답변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른 ‘카테고리 B 지침(Category B authoritative guidance)’에 해당한다. 이 지침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을 따르는 모든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적용 가능하다.

(출처) http://www.gasb.org/cs/ContentServer?c=GASBContent_C&pagename=GASB%2FGASBContent_C%2FGASBNewsPage&cid=1176169015062



**Implementation Guide No. 2017-1,
Implementation Guidance Update—2017**



**Implementation Guide No. 2017-2,
Financial Reporting for Postemployment
Benefit Plans Other Than Pension Plans**

다. 캐나다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PSAB³⁾) 동향

① 수익(Revenue)에 관한 공개초안 발표

PSAB는 수익에 관한 신규 섹션을 발간하는 것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섹션은 CPA Canada PSA Handbook에 기초하여 회계 정책을 정하고 있는 공공부문 회계실체들에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이 공개초안에는 PSAB의 원칙 기준서(Statement of Principles)인 “수익”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에서 시작된 중요한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슈 분석”과 비전문용어로 공개초안을 설명하는 “이해하기 쉬운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익의 체계는 수익의 두 가지 종류(교환거래와 일방적 거래(비교환거래))에 따라 형성된다.
- 만일 거래가 하나 이상의 이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s)를 발생시킨다면, 그 거래는 교환 거래이다.
- 이행의무는 교환거래의 결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지불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강제적인 약속이다.
-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은 공공부문 실체가 이행의무를 만족시켰을 때 인식된다.
- 이행의무는 일시에 혹은 기간에 걸쳐 만족될 수 있다.
- 만일 이행의무가 없다면 일방적 수익(비교환수익)이다.
- 일방적 수익(비교환수익)은 지불인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직접적인 이전 없이 공공부문 실체의 경제적 자원을 증가시킨다.
- 일방적 수익(비교환수익)은 공공부문 실체가 경제적 자원의 유입에 대해 청구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과거 사건이 있을 때 인식된다.

PSAB는 이 신규 섹션이 수익의 인식과 측정을 위한 체계와 기준을 정립하여 재무제표에 보고된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은 물론, 공시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http://www.frascanada.ca/standards-for-public-sector-entities/documents-for-comment/item84248.pdf>

3) PSAB: Public Sector Accounting Board(캐나다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Exposure Draft

Public Sector Accounting Board

Proposed accounting standards

Revenue, Proposed Section PS 3400

May 2017

**COMMENTS TO PSAB MUST BE RECEIVED BY
AUGUST 15, 2017**

A PDF [response form](#) has been posted with this document to assist you in submitting your comments to PSAB. Alternatively, you may send comments via email (in Word format), to ed_psector@cpacanada.ca addressed to:

Michael Puskaric MBA, CPA, CMA
Director, Public Sector Accounting
Public Sector Accounting Board
277 Wellington Street West
Toronto ON M5V 3H2

This Exposure Draft reflects proposals made by the Public Sector Accounting Board (PSAB).

Individuals,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are invited to send written comments on the Exposure Draft proposals. Comments are requested from those who agree with the Exposure Draft as well as from those who do not.

Comments are most helpful if they are related to a specific paragraph or group of paragraphs. Any comments that express disagreement with the proposals in the Exposure Draft should clearly explain the problem and include a suggested alternative, supported by specific reasoning. All comments received by PSAB will be available on the website shortly after the comment deadline, unless confidentiality is requested. The request for confidentiality must be stated explicitly within the response.

〈PSAB 공개초안 「수익」〉

라.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⁴⁾) 동향

① 『AASB 기준서와 IPSASB 기준서의 비교』 보고서 발표

AASB는 2017년 5월 18일 AASB의 호주 회계기준과 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IPSASB)의 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인 『AASB 기준서와 IPSASB 기준서의 비교』를 발표하였다.

※ IPSASB는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반으로 지방의회나 정부부처와 같은 비영리목적 공공 부문 실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서인 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IPSAS)을 발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 AASB가 발표한 연구보고서 「호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검토」는 호주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비영리목적 실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AASB는 호주의 경우 비영리목적 실체 중 상당수를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영리목적 실체 모두에 대해 IPSAS를 적용 중인 뉴질랜드에서 민간부문의 비영리목적 실체에 대한 적용가능성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AASB가 그러한 비영리목적 부문의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키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하거나 지침 및 사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Kris Peach AASB 위원장은 “AASB는 모든 실체의 재무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비영리목적 부문을 위한 추가적인 개정사항과 지침, 사례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비영리목적 부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말했다.

재무부의 회계 및 보고위원회(Treasuries Accounting and Reporting Advisory Committee)의 위원장 David Nicol은 “AASB 스탭이 AASB 기준서와 IPSASB 기준서 간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보고서는 현행 AASB 기준서가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비영리목적 기준서 개정사항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을 가능케 하는 실로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조치다”라고 평했다.

(출처) <http://www.aasb.gov.au/Media-Releases/Improving-not-for-profit-financial-reporting?newsID=232081>

4) AASB: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 Board(호주 회계기준위원회)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AASB Staff Report: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and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Pronouncements

– A Comparison

May 2017

〈AASB 스텝 연구보고서 『AASB 기준서와 IPSASB 기준서의 비교』〉

02

재정통계 동향

1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1)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획재정부는 2017년 5월 18일(목)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일반정부 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 작성 대상인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는 『GFSM(재정통계편람) 2001』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수익, 비용, 자산, 부채 등) 및 PSDS(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각 기관에서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문성유 국장의 축사로 시작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운진 팀장의 재정통계의 개요 및 산출결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 유귀운 회계사의 재정통계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과 마지막으로 작성 관련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5.18),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2) 2016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공공기관으로부터 취합된 재정통계는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통계와 합산하여 일반정부 재정

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로 산출되어 2017년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국제기구인 IMF와 OECD에도 제출될 예정이다.

2 2016회계연도 공기업 결산결과 분석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6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통계 브리핑을 발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산을 수행하고 공기업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된다. 2016 회계연도 결산 대상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등 30개 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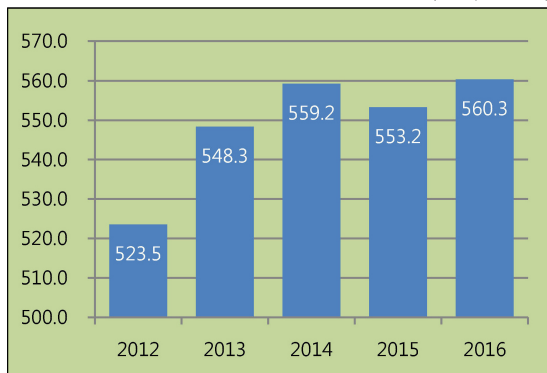
2016 회계연도 공기업의 자산은 560.3조원, 부채는 362.6조원, 자본은 197.8조원이고, 매출액은 141.2조원, 영업이익은 19.7조원, 당기순이익은 8.6조원이다.

가. 공기업 자산과 부채

공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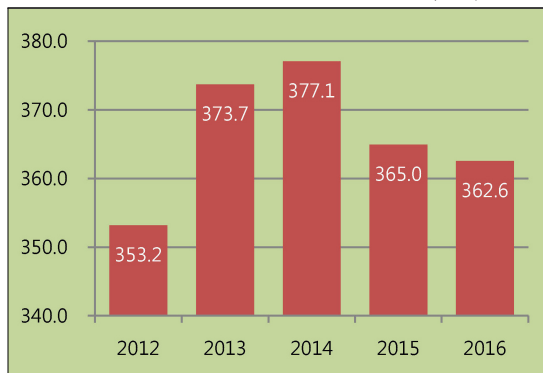
〈공기업 자산〉

(단위 : 조원)



〈공기업 부채〉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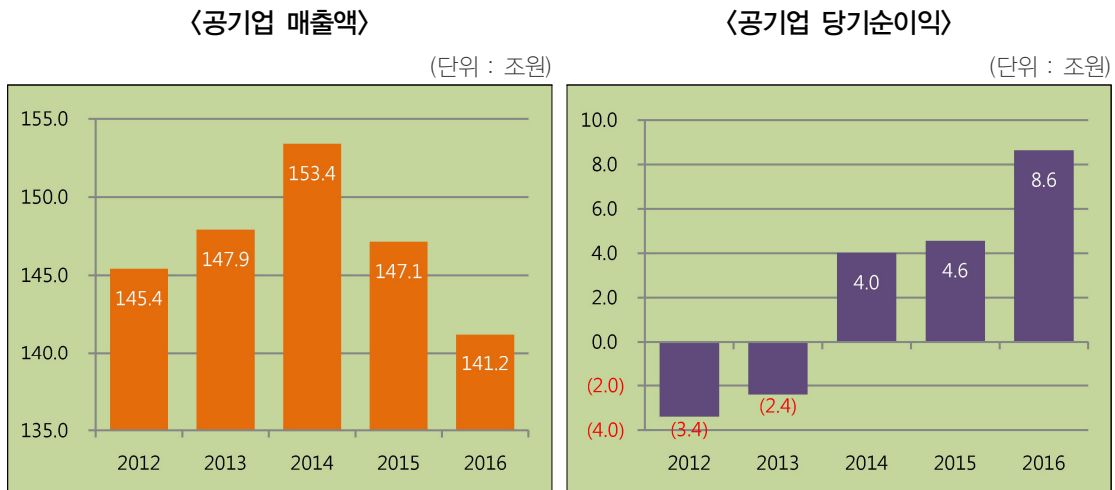


공기업의 자산은 지속적인 설비투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5년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에 대한 자산손상차손 인식, 한국가스공사의 가스판매 저조로 인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감소,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매각, 한국석유공사의 유가하락으로 인한 자산손상차손 등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는 2014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본사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한 차입금 상환 및 한국가스공사의 운영자금 규모 축소로 인한 차입금 감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순이익 증가로 인한 차입금 감소 등에 따라 부채 규모가 감소하였다.

나. 공기업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공기업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주: () 안은 마이너스

공기업의 매출액은 2014년 이후로 감소추세에 있다. LNG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 매출액 감소와 유가하락으로 인한 한국석유공사의 매출액 감소로 인해 전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되었다. 2014년 이후 매출액은 감소하였지만 이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도 감소하였고,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원가감소 등 공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개선됨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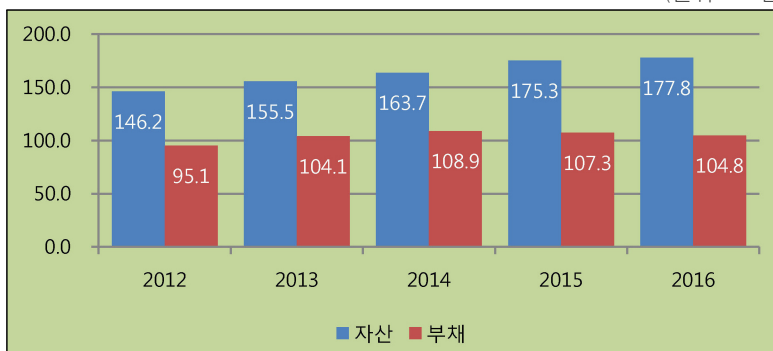
다. 주요 공기업 증감 분석

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는 2016 회계연도 공기업 총자산 중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부채 중 28.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단위 : 조원)



한국전력공사는 지속적인 전력설비투자로 인해 유형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5년 발생한 본사부지 매각을 통한 자금으로 2015년과 2016년 일부 차입금 및 사채를 상환하여 부채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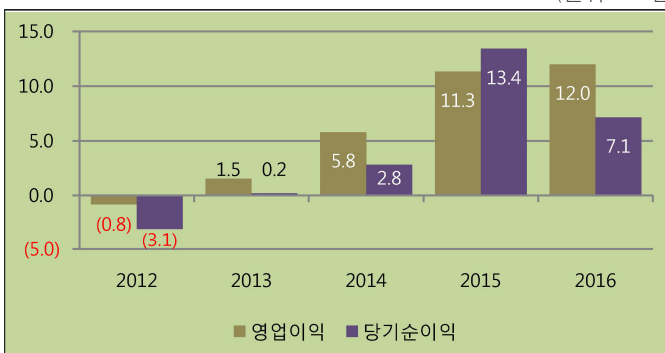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 조원)



주: () 안은 마이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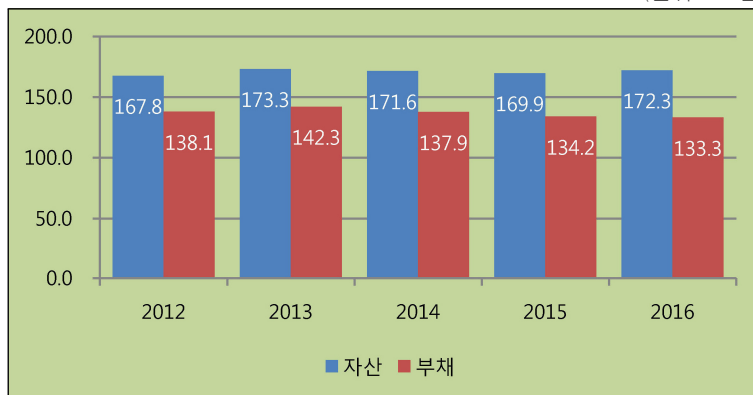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는 전기판매량의 증가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원가율이 낮은 원자력발전 가동률 증가, 연료단가 및 구입전력단가 하락 등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2015년에는 본사 부지매각으로 인한 일시적 처분이익(8.5조원) 발생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회계연도 공기업 총자산 중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부채 중 36.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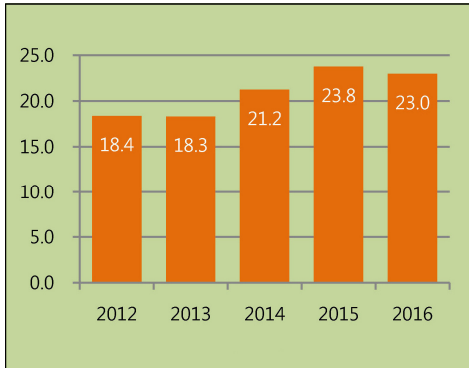
(단위 : 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및 토지 분양, 임대주택 등에 따라 자산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전세임대대여금의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에 대한 차입금 감소로 인해 부채가 감소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증가로 인한 금융부채 상환으로 부채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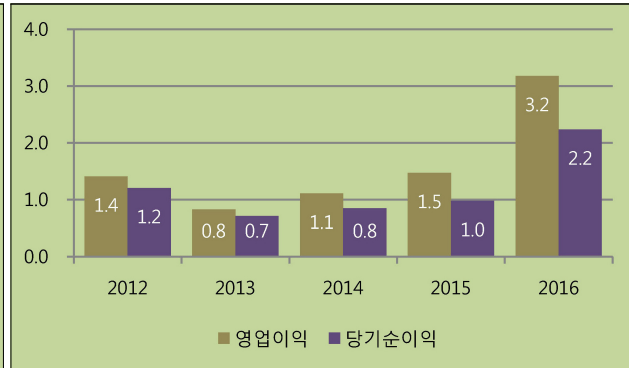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 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지 및 상업용지 등 토지매출의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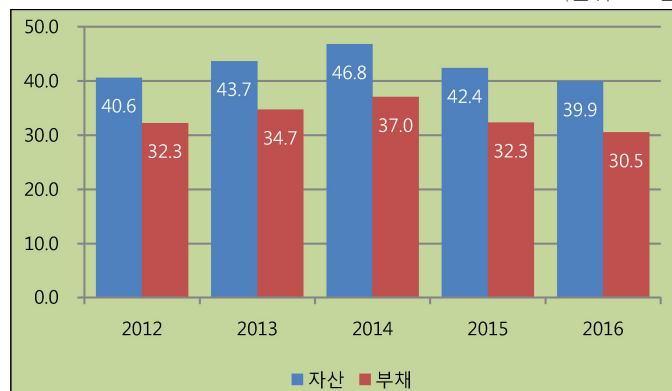
2016년에는 매출액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판매단가 상승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3)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 공기업 총자산 중 7.1%, 총부채 중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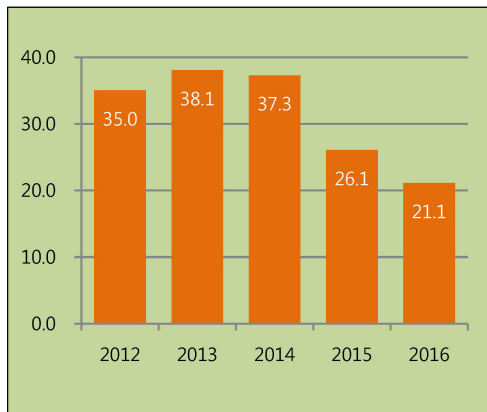
(단위 : 조원)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까지는 해외자원개발투자 및 국내설비투자 등으로 자산과 차입금 및 사채가 증가하였으나 2014년 이후 가스판매량 및 판매단가 하락으로 매출채권 감소, LNG단가 하락으로 재고 자산 감소, 해외투자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등으로 자산이 감소하였고, 운영자금 규모 축소로 인한 차입금 감소로 인해 부채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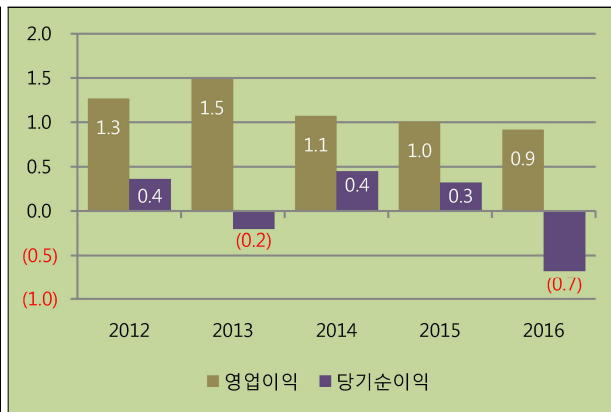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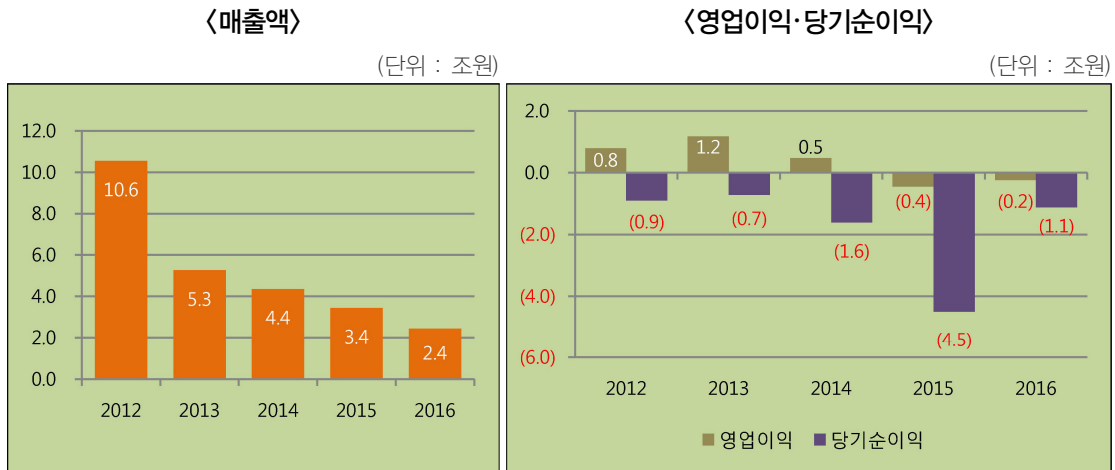


주: () 안은 마이너스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까지는 LNG판매량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2014년 이후 판매물량 감소 및 LNG판매단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였다.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으나 매입단가도 크게 감소하여 영업이익의 큰 변화는 없으며, 당기순이익도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2013년과 2016년 해외자원개발자산 등의 손상차손 발생(2013년 : 6,036억원, 2016년 : 1조 49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4) 한국석유공사



주: () 안은 마이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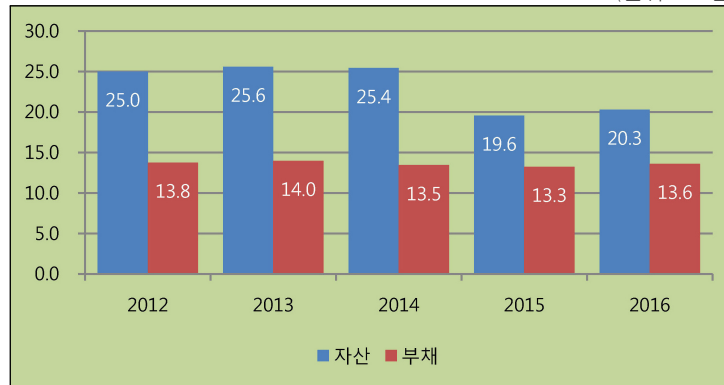
한국석유공사는 2014년 정제사업부문의 종속기업을 매각하면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후로도 유가하락 등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매출액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발생(2014년 : 2조 586억원, 2015년 : 3조 1,920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5) 한국수자원공사

〈자산·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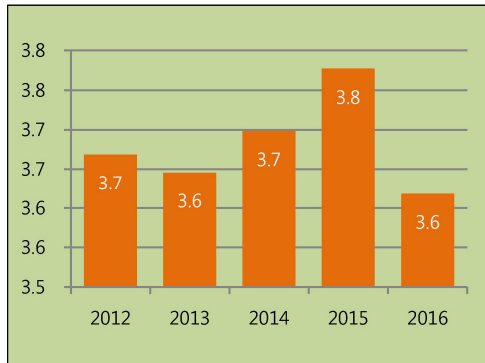
(단위 : 조원)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산·부채의 큰 변동은 없으나, 2015년 4대강 투자금 회수방안 확정으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회수금액의 차이를 무형자산손상(6.3조원)으로 인식하여 자산이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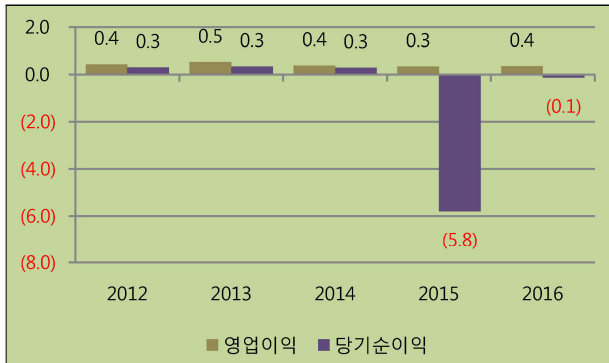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 조원)



주: () 안은 마이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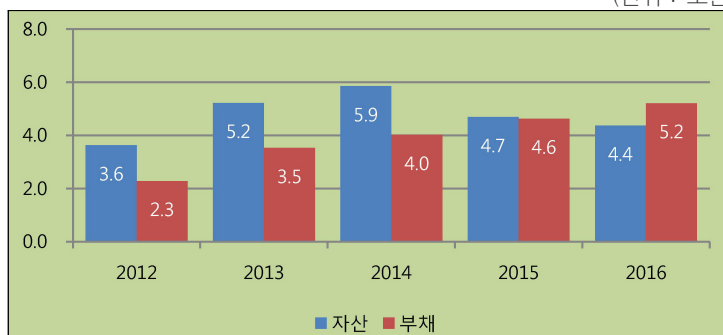
한국수자원공사는 분양매출의 증가로 인해 2015년까지 매출액의 증가를 보였으며 2016년에는 분양매출의 감소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매출액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 4대강 무형자산손상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을 크게 기록하였다.

6)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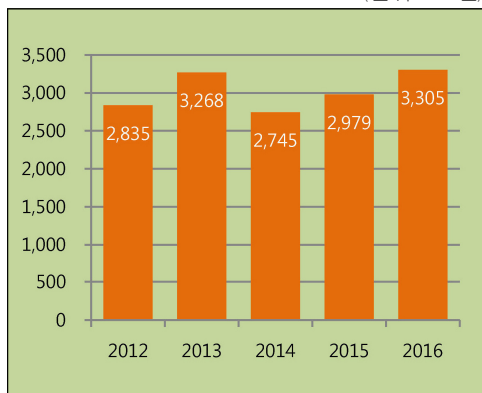
(단위 : 조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4년까지 불레오광산 투자로 인해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였으나, 2014년 이후 불레오광산 손상 및 해외투자주식 손실로 인해 자산이 감소하였고,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한 사채 및 글로벌본드 발행으로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완전자본잠식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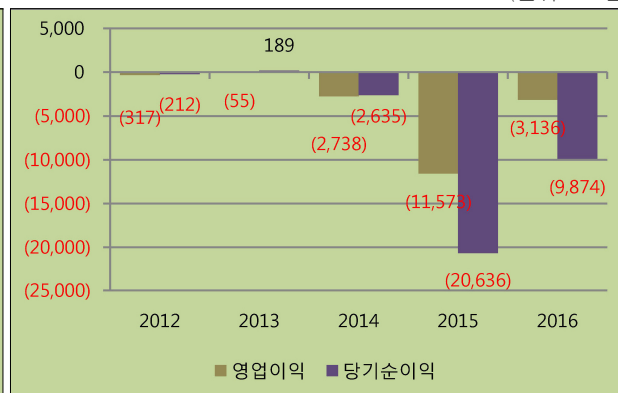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 조원)



주: () 안은 마이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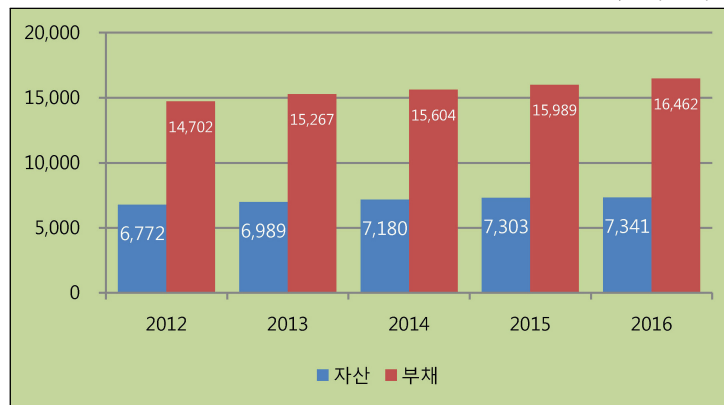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매출액은 광산물판매, 지분투자회사의 지분법이익, 대부투자 이자수익 및 외환 거래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암바토비의 지분법 손실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장기 광물가격 전망치 하락에 따른 투자주식 평가손실 및 유·무형자산 손상 차손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에도 투자주식 평가손실과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 대비 손실규모가 적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7) 대한석탄공사

〈자산·부채〉

(단위 : 억원)



대한석탄공사는 시설투자로 인한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증가로 인해 자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자금 부족 및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차입금 증가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완전자본잠식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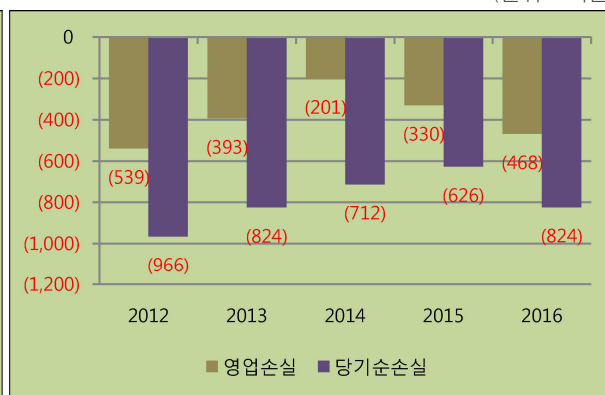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억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주: () 안은 마이너스

대한석탄공사는 2014년까지는 안정지원금의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2014년 이후 동절기 이상고온으로 인해 무연탄 판매액이 급감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석탄산업의 지속적인 생산감축으로 인해 경제성을 상실하여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출액의 영향으로 2014년까지는 소폭 개선되었다가 2015년 이후 경영실적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

03

특집

1 국가회계예규 개선 로드맵 연구용역 결과 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한국회계학회에 위탁한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에 관한 연구」(’16.12.26. ~ 4.25., 연구자: 김이배 교수, 최연식 교수, 이문영 교수, 이지연)가 최종 완료되었다. 이 연구는 2014년 국가회계 체계개편 시 이루어진 형식적 개편을 넘어 내용적 선진화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용역 결과, 센터에서 분석한 현행 22개 국가회계예규의 개정 소요사항을 바탕으로 개정 필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기준개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성적 요소를 감안하여 5개년 업무 수행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가. 현행 국가회계예규의 개선 필요성

현행 국가회계예규는 2009년 이전에 제정되었으며, 감가상각, 재평가, 사회기반시설, 연금 회계처리 등 일부 지침의 경우 2010년에서 2011년에 걸쳐 제정되었다. 그 뒤로 국가회계예규는 일부개정과 체계개편(기준서화 작업) 등을 거쳐 왔으나, 그 내용적 기반은 폐지된 종전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행 유효한 타 회계기준과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예: 우발상황, 우발부채).

또한 기준편제상에서 계정과목해설서 수준의 비용 회계처리지침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국민연금 등) 관련 규정이 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 연금 회계처리지침 내에 포함되어 있는 등 불균형이 존재한다. 국가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국제적 기준 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국가회계예규의 편제를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예: 비용 회계처리지침, 연금 회계처리지침).

회계기준으로서 구조 측면에서 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및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기준(SFFAS) 등 타 회계기준과 비교할 때 다음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예규 관련 일반적인 정보인 개요(발행일, 시행일, 관련 실무해설이나 적용사례, 질의회신, 해당 예규와 관련 있는 다른 예규 등이 포함)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문단이 도출된 배경, 이론적 근거, 실무적 관행, 대체적 회계처리방법, 전문가 의견조회 등을 결론 도출 근거에 충분히 제시하여 이해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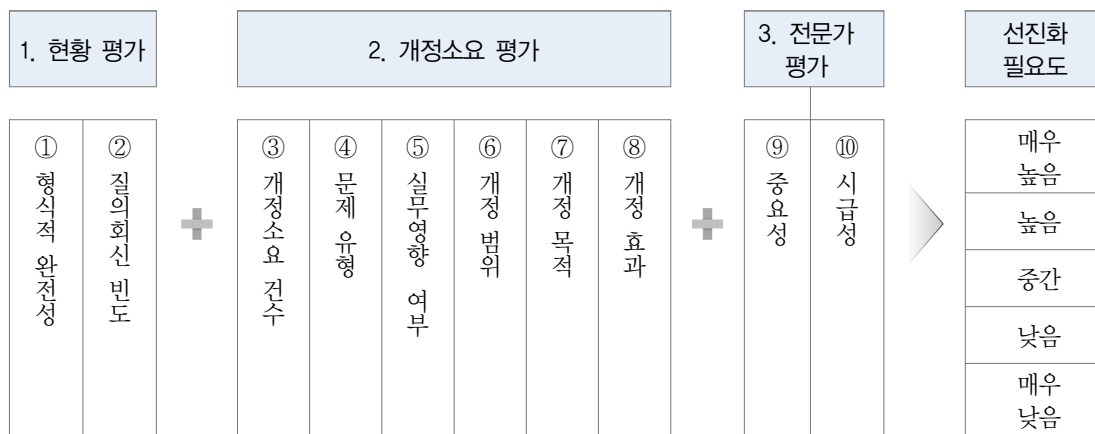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의 보고실체(reporting entity)는 법률에 따른 조직설립, 재정활동과 예산과정 등 민간기업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회계예규에는 일반적인 정보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생소한 회계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회계 정보의 이해가능성과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분야와 중요한 차이가 있는 회계처리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필요도 및 난이도 평가(계량적 측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장기과제로 이연된 예규개선 필요사항을 종합하여 현행 국가회계예규에 관한 개정소요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진은 개별 예규의 선진화 필요도 및 난이도를 계량화하여 최종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유형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각각의 계량화기준에 따라 산출된 평가항목별 점수를 개별 예규별로 100점 만점으로 종합하여 최종 선진화 필요도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또한 개별 평가항목(①~⑩)에 대한 가중치도 고려하여 필요도를 선정하였다.

[그림 1]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필요도 평가절차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선진화 난이도는 개별 예규의 선진화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적·물적 자원 수준과 선진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정적·절차적 복잡성 수준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각 평가항목을 4가지로 구분하고 계량화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1〉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난이도 평가항목의 계량화기준

평가항목	가중치	계량화기준		
		관련 지침 수	관련지침	점수
① 타 지침과의 연관도	10	2	국가회계기준 1개, 기타 지침 1개	25
		2	기타 지침 2개	20
		1	국가회계기준 1개	15
		2	기타지침 1개, 해설서 1개	10
		1	기타지침 1개	5
		1	해설서 1개	2.5
② 절차적 난이도	10	필요절차에 따라 3단계(법령 개정, 내부지침 개정, 기타)로 구분하고 각 25, 10, 5점을 배분		
③ 예상 자원소모량	10	자원소모(소요시간 및 투입인원 등) 예상 수준에 따라 3단계(높음, 보통, 낮음)로 구분하고 각 25, 17.5, 10 점을 배분		
④ 내용적 복잡성	10	내용적 복잡성 수준에 따라 3단계(높음, 보통, 낮음)로 구분하고 각 25, 17.5, 10 점을 배분		
합계	40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유형은 국가회계예규 선진화의 필요도 및 난이도의 계량적 측정점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표 2〉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유형 분류

구분	선진화 난이도						
	높음		중간		낮음		
선진화 필요도	매우 높음	유형 I	1	유형 II	3, 4	유형 III	
	높음	8, 18, 19		15			
	중간	유형 IV		유형 V	6, 9, 10	유형 VI	5, 16, 21
				11, 12			
	낮음	유형 VII	2	유형 VIII	20, 22	유형 IX	7
매우 낮음			13, 14		17		

주: 각 유형의 숫자는 개별 예규의 번호를 의미하며 예규명은 <표 3> 로드맵(안)을 통해 확인 가능함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다. 최종연구결과: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안)

앞에서 22개 예규를 선진화 필요도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은 다음과 같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향후 5개년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하였다.

〈표 3〉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안)

예규명	유형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 재무제표 표시와 부속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	I					
2.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VII					
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II					
4.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II					
5.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VI					
6.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V					
7. 리스 회계처리지침	IX					
8.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I					
9. 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V					
10.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V					
11. 비용 회계처리지침	V					
12. 연금 회계처리지침	V					
13. 보험 회계처리지침	VIII					
14. 보증 회계처리지침	VIII					
15. 용자 회계처리지침	II					
16.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지침	VI					
17.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IX					
18.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I					
19.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I					
20.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VIII					
21.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	VI					
22.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VIII					
신설 검토	IPSAS 및 SFAAS 모두 규정된 사항(신설1)					
	IPSAS에만 규정된 사항(신설2)					
	SFAAS에만 규정된 사항(신설3)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2] 구 지침 및 준칙과 국가회계예규와의 관계도



출처: 기획재정부·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편람』.

2 OECD 보고서

※ 이 섹션은 OECD 저널 등에 실린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관한 해외 논문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논문 개요

(등재) OECD Journal on Budgeting – Volume 2016/1

(제목) The whole elephant: A proposal for integrating cash, accrual, and sustainability-gap accounts

(저자) Tim Irwin – Senior Economist in the Fiscal Affairs Department of the IMF

재정적자는 많은 정치논쟁 및 경제연구에서 논의되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재정적자, 즉 현금적자(cash deficit), 금융적자(financial deficit), 완전-발생주의적자(full-accrual deficit), 마지막으로 포괄적자(comprehensive deficit)를 제시한다. 각각의 재정적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연계 및 신뢰성 등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부 재정적자는 인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과 부채의 처리에 취약하며, 인식대상을 넓은 재정적자는 자산과 부채의 잘못된 평가 및 측정에 따른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 편의상 현금, 금융, 완전-발생주의 및 포괄이라고 불리는 - 4종류의 계정(the accounts)이 각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재정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며, 각기 다른 종류의 조작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나타내는 4종류의 재정지표를 상호 연계해서 모두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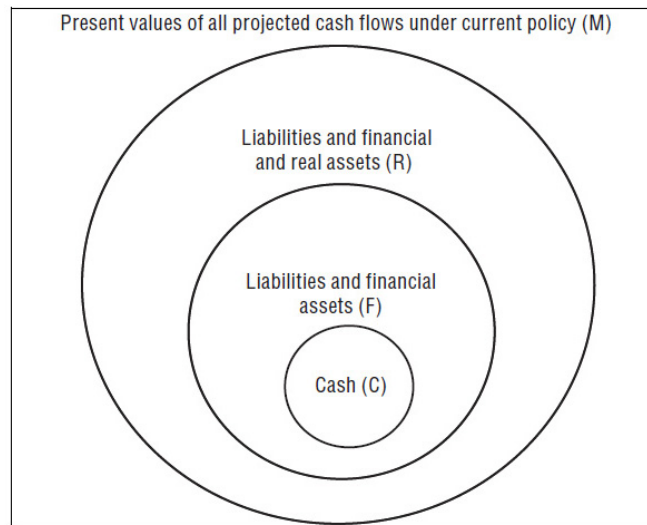
가. 회계시스템

회계시스템은 인식하는 자산과 부채의 수준에 따라 정의할 수 있는데, 현금계정(C)은 현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다른 자산이나 부채는 인식하지 않는다. 금융계정(F)은 모든 금융자산과 그에 상응하는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완전-발생주의계정(R)은 금융계정 및 비금융자산에 해당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포괄계정(M)은 완전-발생주의 회계의 모든 자산과 부채와 정부의 미래지출 및 수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그림 1]은 이러한 회계시스템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집합을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여 작은 부문이 큰 부문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계정을 보다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해주지만, 동일한 자산 및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지 확인하는 일은 까다로울 수 있다. 특히 포괄계정(M)의 경우, 이미 작은 부문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완전-발생주의계정(R)이 자산을 인식한 경우, 포괄계정(M)에 기반을 두는 장기전망은 해당 자산에 의해 생성된 현금흐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림 1]

Figure 1. **Assets and liabilities of four accounting systems**



Source: Irwin (2012).

각기 다른 계정은 재정에 관한 여러 종류의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계정(C)은 현금흐름을 운영, 투자, 재무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중요한 자산의 변동내역을 제공한다. 자산과 부채의 인식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금융계정(F) 및 완전-발생주의계정(R)에서는 재정개선(fiscal developments)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증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포괄계정(M)은 정부의 향후 조세수입 및 지출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위에서 언급한 계정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조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조작은 인식된 순자산을 인식할 수 없는 순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다(Irwin, 2012). 현금계정(C)에서는 정부가 재정상태표에 현금만 기록하지만 미지급금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의 지불을 연기하고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현금적자가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금융계정(F)에서는 채무는 재정상태표에 기록되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한 대금을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금융적자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산과 부채를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상태표에 미지급금이 인식되면 지급을 다음 회계연도로 연기할지라도 지출이 감소하지 않는다. 또한, 비금융자산을 재정상태표에 인식하면 토지 등을 매각하여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다만, 처분 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처분손익은 발생할 수 있음). 포괄계정(M)은 가능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조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 종류의 조작은 자산과 부채를 잘못 측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즉, 재정상태표에 잘못된 값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자산이나 부채가 실제가치 이상으로 측정되면 다른 종류의 조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매출채권을 과대평가하여 수익을 과대 측정함으로써 금융적자가 일시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두 종류의 조작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인식 대상이 아닌 자산과 부채를 통한 조작은 다양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더 많은 자산과 부채가 잘못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새롭게 인식된 자산과 부채는 측정하기가 점점 어려운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자산과 부채가 잘못 측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해야 한다. 이러한 상충관계는 독립된 회계기준, 감사인, 통계작성기관, 전망 등을 통해 측정 오류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1) 현금계정

순수 현금계정(C)에서 순자산 측정치는 현금잔고이며, clean 적자(deficit)는 정부의 현금 잔고가 감소한 것이다. 현금적자는 분석적 관점에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정부의 은행잔고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가 적자를 개선시키기 때문에 특히 조작하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 지급의 지연과 수입 축진은 모두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순수한 형태의 현금계정(C)에서는 수입의 출처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차입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개선한다.

이러한 clean 현금적자의 한계점으로 인해, 현금주의 회계를 사용하는 정부 및 현금 데이터로 작업하는 분석가는 보통 dirty 적자를 모니터링 한다. 예를 들어, 재무 및 기타 거래는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차입 및 채무의 상환과 같은 금융거래는 “선 아래(below the line)” 기록되어 적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실물자산의 판매 또한 그 금액이 크고 특이한 경우 “선 아래”로 취급될 것이다. 또한, 영업현금흐름을 투자현금흐름과 구별해서 영업현금흐름만을 고려한 적자가 모니터링 되기도 하며,

이러한 적자를 the current deficit라고 부른다.

이러한 분류의 효과는 현금계정(C)이 특히 금융(F) 및 완전-발생주의계정(R)에서 더 넓은 범위의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시스템과 유사해진다. 그 결과 dirty 적자는 인식되지 않은 자산과 부채의 거래로 인한 조작에 덜 취약하다. 그러나 dirty 적자는 정부의 현금잔액의 변화뿐만 아니라 변화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측정문제에 의한 취약성은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운영, 투자 또는 재무 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이를 통해 정부의 유동성을 추적하고 단기적인 수행 능력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회계시스템에서 자산과 부채를 잘못 측정하는 방식으로 금융(F) 또는 완전-발생주의(R) 적자를 개선하는 재정 속임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조세수입의 회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여 발생주의 적자를 줄이면 발생주의 조세수입과 현금주의 조세수입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쉬우며 이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

2) 금융계정

최근 현금계정(C)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안은 경제적 가치가 생성, 소비 또는 이전될 때 거래를 기록하는 발생주의 계정의 형태(이곳에선 금융(F)으로 정의)이다. 그러나 발생주의 계정에서는 비금융자산을 인식하지 않아서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는 적자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인식한다. 완전-발생주의 계정(R) 대신 금융계정(F) 사용에 대한 논쟁은 정부가 소유한 많은 실물자산의 성격에 달려있다. 기업의 기계 및 공장 등과 달리, 정부의 도로, 공원, 박물관 등은 주로 현금을 창출하지 않는다. 이것은 해당 자산의 재무가치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새로운 측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금융계정(F)에서 clean 금융적자 악화는 순금융가치의 하락이다. 이 적자는 두 가지 구성 요소(순용자·순차입, 기타변화)로 분해될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통계에서 순용자·순차입이라고 불리는 거래에 따른 적자이다. 그리고 기타변화는 주로 금리, 환율 및 기타 시장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가치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금융적자(clean 또는 dirty)는 현금적자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으로 현금계정(C)과는 달리 지급을 지연하여도 적자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지만 금융적자는 실물자산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등을 매각함으로써 회수된 자금을 통해 줄일 수 있다. 또한, 거래방식의 유형 조정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토지를 직접 구입(적자에 영향을 미침)하는 대신 토지를 소유한 회사의 모든 주식을 구입(적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하는 방식 등을 통해 유사한 성격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적자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융계정(F)에서는 현금계정(C)과 달리 지분상품, 파생상품, 미수채권 등의 가치에 대한 측정이 필요한데, 잘못된 측정으로 인한 조작에 취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공기업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금융적자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지분의 투입은 금융자산의 취득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금융적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공기업의 손실이 누적되어 정부의 투자가 예상손실에 대한 보전성격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의 지분투자가 적절히 평가된다면 순가치는 감소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회계규칙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3) 완전-발생주의 계정

현재, 많은 선진국의 경우 연간 재무제표에서는 적자에 대한 완전-발생주의(R) 측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비금융자산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정부의 비금융자산이 현금 유입을 발생시키지 않을지라도 지속적인 재정적 가치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금융자산은 정부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미래 현금유출을 줄인다. 예를 들어, 교육을 제공하는 정부가 자체 학교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학교의 건설, 구매 또는 임대 미래의 현금 유출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clean 완전-발생주의 적자는 순자산의 감소이다. 이 적자는 여러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다. 재정통계에서는 거대로 인한 순자산 변동에 반영하는 부분(순운영수지)과 보유손익에 따른 기타변화로 나뉜다.

완전-발생주의계정(R)에서는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비금융자산(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등) 또한 인식함에 따라 해당 자산의 판매를 통해서도 적자를 개선할 수 없다. 또한 자산의 구입이 직접적으로 이뤄지거나 자산을 소유한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비금융자산은 그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계처리 시 또 다른 유형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현금을 창출하지 않는 정부의 비금융자산은 종종 과대평가에 따른 조정과 함께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되며, 경우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완전-발생주의(R)에서도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는 적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원가, 감가상각 및 손상을 측정하는 방식이 복잡해서 적자 산정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4) 포괄계정

예상되는 미래 지출 및 조세수입을 고려하지 않는 회계에서는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현행 회계 시스템에서 정부는 양의 순자산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향후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현재의 정책을 지속할 수 없을 수 있다. 반대로, 현재 정부가 부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 향후 재정적으로 안정화된다면, 정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포괄 적자를 주요 측정치로 다루지 않는다. 대신 많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정보가 포괄 형식으로 포함된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다. 미국 정부는 FASAB(2009)에 따라 <표 1>과 같이 현재 연간 재무제표에 미래 조세수입 및 지출에 따른 현재가치 추정치 포함하고 있다. 표는 향후 75년간의 정부의 예상 수입 및 주된 지출의 순현재가치를 동일 기간의 GDP의 현재가치의 백분율로서 보여준다. 표의 맨 윗줄은 예상수입과 주된 지출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것은 정부의 채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조세수입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감소해야 하는 금액을 보여준다.

<표 1> 미국정부의 장기 재정전망 요약

(75년 기간의 GDP의 현재가치 비율,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주요지출	-1.9	-0.7	-1.7	-0.4
수입	20.2	20.3	19.7	19.8
사회보장급여세	4.4	4.4	4.3	4.2
의료급여세	1.4	1.5	1.5	1.4
개인소득세	10.5	10.5	10.5	10.4
기타 수입	4.0	3.9	3.9	3.8
주요 지출	22.1	21.0	21.4	20.2
국방 자유재량	3.6	3.2	3.1	2.1
미국방 자유재량	3.5	1.7	1.7	2.5
사회보장	5.7	5.8	5.9	5.7
Medicare Part A	2.0	2.0	2.2	2.2
Medicare Parts B and D	2.4	2.4	2.4	2.2
Medicaid	2.8	2.7	2.7	2.3
기타 의무	2.2	3	3.4	3.1

예를 들어, 11년의 수입-지출 비율(-0.7%)에서 12년 수입-지출 비율(-1.7%)로의 감소는 (i) 건강 보험료 보조금비용의 포함 여부, (ii) 2001/2003 고소득자를 위한 감세는 무기한 연장될 것이라는 가정의 올해 보고서 (iii) 의료비용 추정을 위한 개선된 방법론에 따라 발생하였고, 이와 반대로 2012년(-1.7%)과 2013년(-0.4%) 사이의 개선은 'the Affordable Care Act'의 효과에 대한 재평가로 인한 것으로, 2013년 추정치는 이전년도에 가정했던 추정치에 비해 이 법이 Medicare 및 Medicaid에 대한 지출의 증가를 늦출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게다가 재무부는 2013년 미국 납세자 구제법안(Taxpayer Relief Act)이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감세를 종료시킴에 따라 이전 연도의 추정치보다 세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포괄계정(M)은 잘못된 측정에 의한 조작에 매우 취약하다. 현재 정책하에서 미래의 조세수입과 지출의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을 명확히 하고, 장기간에 걸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를 예측하는 한편, 이러한 추정에 따라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고, 최종적으로는 예상되는 지출을 현재가치로 바꾸어 줄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한다. 각각의 단계마다 작은 조정으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조작이 없더라도 그 결과는 매우 부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계정(M)에 내포된 아이디어는 전혀 측정하지 않는 것보다 매우 부정확하더라도 측정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술 취한 사람이 빛이 가장 밝다는 이유로 가로등 아래서 열쇠를 찾는다는 농담처럼 완전히 틀리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맞는 것이 더 낫다는 격언에 내포된 생각과 같다. 포괄계정이 잘못 인도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제시하지 않는 것 역시 유사하게 위험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단지 금융계정(F)이나 완전-발생주의계정(R)에 대한 재정상태표만 산출한다면, 재정상태표의 중요성만 과대평가하고, 더 중요한 재정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과 같다.

나. 재정의 큰 그림(The whole elephant)

정부가 재정적자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경우, 재정적자에 대한 척도(현금, 순금융자산, 순자산, 포괄순자산)를 미리 명시해야 한다. 물론 4가지 회계시스템 각각에 해당하는 재정상태표 및 기타명세와 함께 4가지 재정적자를 모두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이후 설명과 같이 각각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표 2〉는 4가지 계정의 가능한 요약 형태를 보여주며, 순자산의 4가지 버전 - 현금, 순금융자산, 순자산, 포괄순자산 -의 주요 dirty 잉여 및 clean 잉여를 구성하는 기타변화를 포함, 각각의 기초 및 기말잔액을 보여준다.

〈표 2〉 4가지 계정

기초		clean 잉여의 구성		기말
C	기초 현금	영업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과 가치변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기말 현금
F	기초 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순금융자산의 기타변동	기말 금융자산
R	기초 순자산	순운영적자	순자산의 기타변동	기말 순자산
M	기초 포괄순자산	거래와 정책변화로 인한 포괄순자산의 변동	포괄순자산의 기타변동	기말 포괄순자산

1) 계정의 조정

상대적으로 간단한 다음 두 개의 표는 서로 다른 재정적자 간의 주요 관계를 보여준다. 하나는 각각의 순자산의 증가(clean surplus)가 계정과 관련된 요소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표 2>의 4가지 dirty 적자(dirty deficits)를 연결한다.

clean 잉여는 점점 더 많은 자산과 부채로 인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계정(F), 발생주의 계정(R) 그리고 포괄계정(M)의 잉여가 구성되는 것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clean 발생주의 잉여는 금융계정의 잉여에 정부의 실물자산 증가분을 더한 것과 같다. <표 3>은 현금 계정을 제외한 각각의 clean 잉여가 삼각형패턴으로 분해되는 방법을 보여준다.

<표 3> Clean surplus(잉여)의 구성

Clean surplus(잉여)				
	C	F	R	M
C	현금의 증가			
F	현금의 증가	비현금 순금융자산의 증가		
R	현금의 증가	비현금 순금융자산의 증가	실물자산의 증가	
M	현금의 증가	비현금 순금융자산의 증가	실물자산의 증가	순자산에서 제외된 포괄순자산의 증가

<표 2>의 dirty 잉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조정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Box1. dirty 잉여의 조정

다음은 <표 2>의 4가지 dirty 잉여를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dirty 현금 잉여에서 시작하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더해준다.

: 운영활동으로 인한 수입(현금주의)과 수익(발생주의)의 차이를 더한다.

운영활동으로 인한 지출(현금주의)과 비용(발생주의)의 차이를 뺀다.

비금융자산의 순취득금액과 투자로 인한 현금흐름을 빼준다.

>> 순용자/순차입 값을 얻는다.

그리고 순유자/순차입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순운영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금융자산의 거래를 가져온다.

: 비금융자산의 취득을 더해주고 처분을 빼준다.
비금융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빼준다.

>> 순운영수지 값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세금이나 지출정책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더해준다.

: 이미 인식된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정책변화로 인한 미래 지출과 수입의 현재가치 변동을 더해준다.

>>포괄계정의 dirty 잉여를 얻는다.

2) 사례

4가지 계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정정보를 일관성 있게 산출하는 정부는 없지만, 최소한 2개 정부는 3가지 부분의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호주 통계국(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작성하는 포괄적인 재정통계를 이용해서 현금계정(C), 금융계정(F), 완전-발생주의계정(R) 및 관련 조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미국 연방정부(the US federal government)의 재정 보고서는 현금계정(C), 완전-발생주의계정(R) 및 포괄계정(M)의 근사치를 보여주는 정보를 제공한다.

〈표 4〉 2012/13년 호주 일반정부의 3가지 계정 요약

(2012/13 GDP 대비 비율, %)

	2012.6.30.(기초)	dirty 잉여 (2012~13년)	기타변화 (2012~13년)	2013.6.30.(기말)
C	2.0	-2.4	2.5	2.1
F	-18.8	-2.5	7.1	-14.2
R	47.4	-1.4	8.7	54.8

주: GDP는 12,13년의 평균치 사용

출처: 호주 통계청(2014) 및 기타정보는 www.abs.gov.au/ausstats/abs@.nsf/mf/5512.0에서 얻을 수 있으며, GDP의 경우 2014년 4월 IMF의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 참고

〈표 4〉가 의미하는 것을 알기 위해, 우선 각 행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자.

현금계정(C)은 일반정부가 기초와 기말에 GDP의 약 2%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다. 따라서 clean 현금 잉여는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나 영업과 투자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정의되는 dirty 현금 잉여는 GDP의 -2.4%로 나타났다. 현금흐름을 조사한 결과 이 적자는 모두 투자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고, 운영으로 인한 현금의 약간의 흑자를 기록했다. 동 자료분석을 통해 정부는 투자를 위해서만 돈을 빌려야 한다는 현금기반의 황금률(Golden Rule)을 준수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계정(F)은 일반정부가 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순금융자산으로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1년간 dirty 금융 잉여(순융자/순차입)는 GDP의 -2.5%였다. 그러나 거래로 인한 감소보다 일반정부의 자산·부채의 보유손익(평가 등)으로 인한 증가가 더 커서 순금융가치는 기초 대비 GDP의 4.6% 증가하였다. 이들 중 가장 큰 것은 공무원연금부채의 추정변경에 따른 부채 감소였다.

완전-발생주의계정(R)은 비금융자산을 포함하여 일반정부의 순자산이 기초에 GDP의 47%임을 보여준다. 거래로 인해 순자산은 GDP의 1.4% 감소하였지만, 주로 위에서 언급한 순금융자산의 가치증가와 일부 비금융자산의 재평가로 1년간 순자산은 증가하였다.

〈표 5〉는 완전-발생주의 clean 잉여가 더 좁은 계정의 요소로 구성되는 것을 보여준다. GDP의 7.4% 순가치 증가는 현금의 증가(GDP의 0.1%) 일부와 현금이외의 금융자산(GDP의 4.5%)과 비금융자산의 가치(GDP의 2.8%) 증가로 구성된다.

〈표 5〉 표 4의 완전-발생주의 clean 잉여의 구성

(2012/13 GDP 대비 비율)

clean 잉여(C+F+R)			증분 기여		
			C	F	R
R	완전 발생주의 잉여	7.4	0.1	4.5	2.8

출처: 호주 통계청(2014), 기타정보는 www.abs.gov.au/ausstats/abs@.nsf/mf/5512.0에서 얻을 수 있으며, GDP의 경우 2014년 4월 IMF의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 참고

〈표 6〉은 〈box 1〉의 작성방식에 따라 세 가지 dirty 잉여를 조정한다. 조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현금 계정(C)과 금융계정(M)의 dirty 적자가 비록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들의 구성요소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수익의 각 측정치는 GDP의 0.7% 차이가 나지만, 이것은 운영과 투자의 지출의 각 측정 기준의 차이로 상쇄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순융자·순차입과 순운영수지의 차이인 GDP의 1.1%는 비금융자산(취득-처분)에 대한 투자인 GDP의 2.8%와 감가상각비인 GDP의 1.7%를 뺀 것으로 구성된다.

〈표 6〉 표 4의 dirty 잉여의 조정

(2012/13 GDP 대비 비율, %)

현금 잉여에서 시작		-2.4
현금에서 발생주의로 조정		
운영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더하고, 수입은 차감	+	0.7
운영활동으로 인한 비용은 빼고, 현금 지출은 가산	-	0.7
비금융자산의 순취득금액과 투자로 인한 현금흐름을 차감	-	0.2
순용자/ 순차입 값 도출	=	-2.5
그런 다음 실물자산의 거래를 고려		
비금융자산의 취득에서 처분을 뺀 값 추가	+	2.8
비금융자산의 감가상각비 차감	-	1.7
순운영수지 도출	=	-1.4

출처: 호주 통계청(2014), 기타정보는 www.abs.gov.au/ausstats/abs@.nsf/mf/5512.0에서 얻을 수 있으며, GDP의 경우 2014년 4월 IMF의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 참고

〈표 4,5,6〉의 세부분으로 구성된 계정과 호주통계청에서 산출한 기본 명세들은 호주 일반정부의 재정에 대하여 기존의 단일척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나의 일관된 회계시스템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혼동을 주지 않고 재정적자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여전히 조세수입과 지출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놓치고 있다. 호주정부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매년 업데이트 되지 않아 포괄계정을 연간기준으로 계산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포괄계정(M)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무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몇 가지 단순화 가정을 한다면, 요약된 포괄계정(M)은 물론 현금계정(C)과 완전-발생주의 계정(R)도 생성할 수 있다 (미국정부의 재정보고서는 재정통계 개념이 아닌 자체 회계기준을 따르므로 현금 및 완전-발생주의 적자 정의는 위에 명시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표 7〉은 〈표 4〉와 달리 3개년의 잔액과 2개년의 변동분을 제공한다. 현금적자(C)는 미국의 재정적자에 의해 산정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간주되는 것이지만 일부 비현금거래를 포함한다. 완전-발생주의 적자(R)는 회계에서 재정운영순원가(the net operating cost)로 불리는 측정치이며 본질적으로 clean이다. 그리고, 순자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화는 없다. 마지막으로 포괄계정(M)은 미국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제시하는 미래 수입과 지출에 따른 순현재가치를 순자산에 추가함으로써

도출되며, 비교가능성을 위해 2012 GDP의 비율로 표시하였다. dirty 포괄잉여는 재정운영순원가의 (-) 값과 법 개편으로 인한 미래 수익과 지출의 현재가치를 더한 값이다.

〈표 7〉 미국연방정부의 2011-13년 계정 요약

(2012 GDP대비 비율)

	2012기초	dirty 잉여	기타변화	2012기말	dirty 잉여	기타변화	2013기말
C	1.1	-6.7	+6.9	1.3	-4.2	4.2	1.3
R	-91.0	-8.1	0.0	-99.1	-5.0	0.0	-104.1
M	-130.4	-8.1	-62.2	-200.7	25.2	46.8	-128.7

주: 현금은 재정상태표에서 가져왔으나, 현금부족분은 재정적자로 간주. 순자산은 대차대조표의 "total net position"이고, 완전발생주의 재정적자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가져옴. 포괄순자산은 보고서의 감사받지 않은 보충정보에 표시된 주요 지출 및 수익의 75년 예상치의 순가와 순현재가치의 합계로 간주. 포괄적자는 재정운영순원가와 개정된 법률에 의한 예상치의 순현재가치의 합과 같음. 2012년 GDP사용.

출처: 미국 재무부(2012,2013) 및 2014년 4월 IMF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상 GDP

현금계정(C)은 11/12년 GDP의 약 7%에서 12/13년 GDP의 4%로 예산적자(budget deficit)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적자에 따른 현금부족분은 차입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정부의 현금잔액은 세 시점에서 모두 GDP의 약 1% 수준(1.1~1.3%)이다.

완전-발생주의 계정(R)은 예산적자보다 완전-발생주의 적자가 대략 GDP의 1% 정도 큰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적자로 인해 정부의 순자산은 2012년 기초 GDP의 -91%에서 2013년 기말 GDP의 -104%로 2년간 감소하게 된다. 예산적자와 재정운영순원가 간의 차이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주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에 따른 부채 때문이다(미국 재무부, 2013:7). 현금과 완전-발생주의 적자 간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결국 상쇄될 시간차로 인한 것이지만,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 참고로, 발생주의 적자는 현금 적자를 지난 19년간 17번이나 초과했다.

포괄계정(M)은 포괄순자산의 가치가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에 GDP의 약 -130%로 유사했지만, 중간에 GDP의 -200%까지 떨어지는 등 변동이 컸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앞서 〈표 1〉에서 설명하였다.

미국연방정부에서 세 부분으로 구성된 계정들은 공공재정의 변화에 대해 단 하나의 재정적자 수치가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으로, 완전-발생주의 적자(R)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무원연금 및 퇴역군인연금의 비용이 상당히 큰 것을 보여준다. 한편, 포괄계정(M)은 현금이나 완전-발생주의 적자(R)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법안이 공공재정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 결론

요약해보면, 적자를 측정하는 방법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들은 또한 각기 다른 종류의 조작에 취약하다. 첫 째는 인식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부채의 조정을 통해 인식되는 순자산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러한 조작은 현금계정(M)에서 금융계정(F), 발생주의계정(R)으로 옮겨가듯이, 자산과 부채의 인식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은 자산과 부채를 잘못 측정할 오류의 발생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장·단점을 서로 절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하나의 지표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정보가 다른 지표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범위의 재정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공공재정을 대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4개의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적자와 관련 회계계정(현금계정, 금융계정, 발생주의 계정과 포괄계정)을 나타내는 것을 제안한다: 재정의 전체 모습을 보기 위해 어떤 하나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4가지 적자의 각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만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다.

04

센터 동향

1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방안 연구·분석」 연구용역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수탁연구로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방안 연구·분석(’17.3.6~8.2, 5개월)」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발생주의 국가회계로부터 산출되는 재무정보가 이해관계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연구범위는 국내 활용방안 연구와 해외 발생주의 활용사례 분석으로 구분된다.

국내 활용방안 연구는 성과평가,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시범산출, 수요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인 활용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활용가능한 수준의 원가정보의 산출을 위해 원가세분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가. 성과평가 연구자문단회의 개최(’17.4.26. 기획재정부 5층 회의실)

성과평가 연구자문단 회의에서는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성과평가 활용방안’ 중 성과평가 분과의 연구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시범사업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분석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사업’, ‘기관운영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국립박물관 운영사업’, ‘용자보조 효과 분석을 위한 용자사업’ 등 3개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연구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분석은 연구보고서에서 제외하며, 서비스가 균질화된 책임운영기관(국립과학관 등)을 대상으로 효율성 평가사례를 확대하고, 용자사업의 경우 대표성이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연구 진행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최종 보고서에는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나. 재정지표 분과

1) 재정지표 연구자문단회의 개최(’17.4.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EMNA 회의실)

재정지표 분과의 연구자문단 회의에서는 ‘활용 가능한 재정지표의 개발방향의 적정성’과 ‘기획재정부 등 정책담당자가 활용 가능한 지표 추가’ 및 ‘정책담당자 수요조사 방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연구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개발하는 재정지표의 수요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개발할 지표를 4~5개로 한정하되 개발배경, 필요성, 수요조사 내용 및 적정성 분석 등을 포함한 타당성 보고서 형식으로 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OECD 등 해외에서 활용하는 지표들을 참고하여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재정지표 개발 후 적정성 검토를 위한 2차 연구자문단 회의를 7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재정지표 연구자문단 회의(4.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EMNA 회의실〉

2) 재정지표 수요조사(기획재정부 '17.5.11. / 국회 '17.5.18. ~ 5.2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방안 연구·분석」 연구과제 중 재정지표 분야 연구의 일환으로 재정지표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요조사는 정책담당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표 개발을 목표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한 FGI 및 1:1 심층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이 수요조사에서 ‘발생주의 재정지표 활용 여부’, ‘활용 가능한 재정지표의 종류’ 및 ‘추가 개발이 필요한 지표의 조건’ 등 재정지표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예측가능성 확보, OECD 국가와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해외 사례 조사, 지표에 대한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세한 서술정보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원가세분화 연구자문단회의 개최(17.4.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EMNA 회의실)

원가세분화 연구자문단회의에서는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방안 연구 중 원가세분화 분야의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원가집계단위 세분화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비배분비용(수익)의 구분 기준', '세부사업 원가 정보 제공 방안', '설문지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성과평가, 예산환류 등을 통한 원가정보의 활용을 위해 원가세분화가 요구되며, 세분화 수준은 세부사업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였다. 또한, 세부사업 원가 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현행 예결산 정보제공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원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자문단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연구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dBrain의 서면자문을 거쳐 원가세분화 설문지를 확정하고 부처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세부사업 수준에서 원가 세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라. 해외사례 조사(OECD 공동연구)

1) 연구자문단회의 개최(17.4.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EMNA 회의실)

해외분과(OECD 공동연구) 연구자문단회의에서는 OECD의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구자문단은 OECD의 설문결과가 국내 3가지 연구과제와 적절히 연계되고 또 실질적인 시사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일반적 내용의 공통문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을 묻는 세부문항을 늘려야 하며, 질문의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프랑스의 경우 재정제도 구조가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으므로 인터뷰 대상국가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회의 이후 연구자문단의 자문결과와 함께 국내 연구과제와 관련된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OECD에 전달하였다.

2) OECD 연구용역 진행점검회의(유선회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두 차례에 걸쳐 OECD 공동연구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4월 21일에 열린 첫 번째 확인회의에서는 OECD가 수행할 설문조사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5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중간보고회의 세부 일정을 조율하였다. OECD는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설정된 이번 설문기간이 통상적인 설문기간에 비해 상당히 짧으므로 적극적인 독려에도 회신이 일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6월 19일에 열린 두 번째 확인회의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설문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덴마크와 미국의 경우 연구기간 내 설문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조사는 작년 OECD 설문결과 등으로

대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연구보고서는 국어 번역 일정 등을 감안하여 7월 7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마.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방안 연구·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본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5월 26일 기획재정부 5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국내 활용방안에 관한 분과별 연구진행사항을 보고하였고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과평가의 경우 시범평가 사례로 제시한 기관운영지원사업의 효율성 평가와 용자사업의 용자보조 효과 평가 이외에 다른 사업유형을 발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시범평가 사례를 보강하는 방안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정지표의 경우 발생주의 재정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 조사를 추가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원가세분화 과제와 관련하여 원가세분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보완하고, 원가세분화로 인한 비용과 효익 측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중간보고회 및 연구진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방안 연구·분석」 연구용역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수행 중인 국내활용방안 연구와 OECD가 수행하는 해외 발생주의 사례조사를 포함하여 완성될 예정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최종보고회 이전에 보완된 국내활용방안 연구 및 해외 발생주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7월 초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국가부채의 측정과 보고의 비교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중간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위탁과제인 『국가부채의 측정과 보고의 비교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초빙연구위원인 박청규 교수(아주대학교)가 중간보고를 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 장기재정전망센터 박명호 박사, 그리고 센터 연구원들이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가. 개요

- 제 목 : 국가부채의 측정과 보고의 비교가능성에 관한 연구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 일 시 : 2017.5.11.(목)
- 장 소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의실
- 참석자 : 정도진 소장, 박명호 박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원

나. 중간보고 요약

우리나라의 부채(D2)는 OECD 국가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부채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과거 현금주의 국가채무(D1)와 국제기준(PSDS)에 따른 발생주의 국가부채(D2)의 비교를 통해 유용한 재정정보를 도출하여 건전한 재정관리를 유도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발생주의 국가부채의 가치 관련성(Value Relevance)을 입증하기 위해 그 구성항목(상품유형, 만기, 이자율 등) 및 측정방법에 따라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국가신용등급을 통해 분석하려고 한다.

[정도진] 발생주의 국가부채(D2)를 활용 측면에서 부채항목의 측정이나 부채 산출 범위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장기재정전망을 추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박명호] 우리나라의 부채를 D1, D2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부채 지표를 쓰고 있으며, 이러한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해외사례가 조사되어야 보다 의미 있는 국제비교가 될 것이다.

3 OECD 공동연구 현지 중간보고 및 심층조사 참관 후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정도진 소장과 김선재 회계사, 임정혁 연구원은 지난 5월 16일에 기획재정부 수탁과제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방안 연구분석』 중 OECD와 공동연구 중인 해외사례 분석 연구의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였으며, 익일인 5월 17일에는 프랑스의 공공부문 회계기준 제정기구인 CNoCP와의 정보 교환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다음은 양 회의와 관련된 세부 내용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5월 1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공동연구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였다. 이 연구는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OECD의 예산 및 공공지출과(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Division)와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다.

중간보고회는 예산 및 공공지출과의 책임자인 Ronnie Downes의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OECD가 수행 중인 설문조사와 인터뷰의 대상국가 선정기준에 관한 논의, 설문 및 인터뷰의 진행경과 및 보고서 제출 일정에 대한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OECD는 2016년에 수행한 발생주의 회계제도 관련 설문조사인 2016 OECD Accruals Survey의 결과와 OECD 연구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25개국 중 14개국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그 중 8개국에 대한 인터뷰를 계획하였다. OECD는 6월 중순까지 모든 설문을 회수하고 인터뷰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례조사 대상국가

- (설문조사) 호주, 덴마크, 일본, 뉴질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에스토니아, 스위스, 미국, 노르웨이, 한국(이상 14개국)
- (인터뷰) 호주, 덴마크, 일본,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이상 8개국)

설문조사와 인터뷰 대상 국가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의 경우 2016 Accruals Survey 당시, 총 7개*의 목표 중 한 가지 이상을 ‘완전히 달성’했다고 표시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되, ‘투명성’과 ‘회계책임성’만을 완전히 달성하였다고 표시한 국가들은 제외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경우

주목할 만한 특징 또는 경험을 가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되, ‘발생주의에 대한 관심 또는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한 국가들은 제외하여 선정하였다.

*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목표 (7개) : 투명성, 회계책임성, 재무 분석, 공공재정에 대한 인식개선, 자산·부채 관리, 전부원가, 사업 프로세스의 개선

한편, 센터는 OECD 예산및공공지출과 선임정책관이자 이번 공동연구의 핵심 연구진 중 한 명인 Delphine Moretti에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제자문위원직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센터와 OECD가 추가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5월 17일에는 프랑스의 공공부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인 CNoCP(Counsel de normalisation des comptes public)와 기준 제정기구 간 정보교환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CNoCP는 프랑스 재무부(Ministry of Budget) 산하의 독립기구로서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자국의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를 개발하여 발표한 바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향후 한국 중앙정부 회계기준의 개념체계 개발과 관련된 업무협력을 위해 올해 하반기 내에 CNoCP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OECD 공동연구 중간보고회(5.17.),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4 2016회계연도 회계·결산지원단 간담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5월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2016회계연도 회계·결산지원단 간담회를 지원하였다. 회계·결산지원단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한 직후인 지난 2017년 1월부터 각 중앙관서에 배치되어 약 4개월 동안 중앙관서 재무결산을 지원하였다.



이날 행사는 회계·결산지원단 10명을 포함 총 17명이 참석하였으며, 회계·결산지원단 운영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업무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 임동규 과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회계·결산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전하였고 간담회 자리를 통한 가감 없는 의견 개진을 당부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최금주 회계사는 회계·결산지원단 운영결과와 회계·결산지원단이 사전에 작성한 건의사항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들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회계·결산지원단의 건의사항은 디브레인시스템 및 회계·결산지원단 운영 관련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작년보다 인원이 감소하였으나 많은 의견을 제안하여 향후 개선과제 선정에 도움이 되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과 함께 디브레인시스템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기타 개선의견에 대해서도 2017회계연도 결산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05 세미나

1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지난 5월 13일(토)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관에서 한국회계정보학회와 공동으로 「2017년 한국회계정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동 학술발표대회를 통해 발생주의 재정통계 분야 연구성과물 확산 및 전문가 저변 확대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 수집과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가. 행사 개요

- 일 시 : 2017.5.13.(토)
- 장 소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관(310관)
- 주 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회장 권혁대 교수(목원대)의 개회사에 이어 유광열 증선위 상임위원과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이후 기조연설에서는 정도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숫자를 통한 新 국가경영」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발표하였다. 해당 연설에서는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산출하고 있는 다양한 발생주의 재정통계에 대한 소개 및 지표로 살펴본 국가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발생주의 재정통계 자료를 이용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한국회계정보학회(5.13.),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관〉

나. 주제발표 및 토론결과 요약

□ 주제 1 :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산출과 관리방안 연구 (엄기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원)

첫 번째 주제인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산출과 관리방안 연구」는 엄기중 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부채통계에 초점을 맞춰 부채의 기준, 범위, 종류 및 규모를 검토하여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부채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이배 교수(덕성여자대학교)가 사회를 맡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기중] 기획재정부는 부채 등 재정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 작성기준인 GFSM 2001을 도입하여 현금주의로 산출되던 재정통계를 발생주의로 전환하였으며, 정부의 범위를 확장하여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기구 등이 발표하는 국가부채는 총 6여 가지로 발표됨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부채통계에 초점을 맞춰 부채의 기준, 범위, 종류 및 규모를 검토하여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부채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박재환] 재정통계분야에 발생주의를 도입하여 산출한 지 5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이제 산출자 스스로가 재정통계 산출이 가지는 가치를 연구하고 홍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생각함. 현재 시스템은 산출의 범위 확대에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산출되는 재정통계들이 가지는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함



〈한국회계정보학회(5.13.),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관〉

□ 주제 2 : 국가부채의 측정과 보고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박청규, 아주대학교 교수)

두 번째 주제인 「국가부채의 측정과 보고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박청규 교수(아주대학교)는 국가부채 비교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국가의 부채와 경제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부채의 가치관련성(Value Relevance)을 비교분석하여 부채측정과 보고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청규]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GDP의 약 40%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OECD 국가들 중 안정권에 있으나, 단순 국가간 양적비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질적 측면의 비교가 필요한 시점임. 각 나라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국가부채를 보고하고 있지만, 각 국가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인 특성상 보고된 부채의 활용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각 국가의 부채와 경제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부채의 가치관련성(Value Relevance)을 비교분석하여 부채측정과 보고의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김문수] 다양한 부채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지표들의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홍보가 필요함. 부채지표들 발표 시 산출과정 및 집계 범위를 투명하게 오픈하여 부채 과소 계상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조용언] 앞서 말씀하신 김문수 교수님의 말씀처럼 6~7가지 이상의 다양한 부채지표들은 이용자 입장에서 사용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센터와 학계에서 해당 부채들의 차이와 설명력 검증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한국회계정보학회(5.13.),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관〉

□ 주제 3 :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관계성 검증
(배기수, 충북대학교 교수)

세 번째 주제는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관계성 검증」으로 배기수 교수(충북대학교)는 세출예산과 세출지출의 차이인 불용·이월액과 발생주의에 의해 산출되는 국가재정운영표의 순원가와의 관계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소관별 불용·이월액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 김이배 교수(덕성여자대학교)의 사회 아래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기수] '14~'15년 기재부의 중점 관리사업의 부처·회계별 세출예산 이월 및 불용액 현황 분석을 토대로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관계성 검증을 수행하였음. 이월과 불용액을 구분하여 발생주의 재무정보와의 관계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월과 불용액이 과다한 부처 또는 회계실체별 특성을 발생주의 재무정보로 설명가능한지 검증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불용·이월액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재정정책수립에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조용언] 재량적 불용액을 측정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재량적 불용액 측정을 위해 Dechow et al.(1995)의 '재량적 발생액 측정하는 모형'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박재환] 본 연구를 통해 정부 부처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implication)을 줄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우선 예산 불용 및 이월액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모형을 만드는 것은 차후에 해결할 일이라고 판단됨



〈한국회계정보학회(5.13.),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관〉

2 한국정부회계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국가회계 연구분야 발표

국가회계분야 연구성과물 확산을 위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한국정부회계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에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성과평가 활용」 연구주제를 발표함

가. 개요

1. 주 제 : 정부회계 정보 활용 제고 및 지방회계제도 개선방안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성과평가 활용방안(이남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문연구원)
2. 일 시 : '17.05.26.(금) 13:30~18:30
3. 장 소 :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회의실
4. 주 최 :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정부회계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5.26.),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회의실〉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이남주 전문연구원은 ‘2017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발생주의 재무정보와 성과평가의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24개 재정사업유형 중 발생주의 재무정보가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사업유형으로 2개의 단위사업이 선정된 절차를 설명하고

대상 사업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심재영 교수(방송통신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조광희 교수(동국대학교), 정창훈 교수(인하대학교)의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 :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성과평가 활용방안 〉

- [이남주 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FGI를 실시하여 발생주의 재무정보가 성과평가에 유용할 만한 사업을 검토하여 ① 기관운영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관운영지원(국립박물관 운영)과 ② 용자 보조효과 분석을 위한 용자사업(민간보육시설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여 2 가지 대상사업의 시범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사업 수준의 원가 세분화가 필요하며, 용자사업의 경우 다양한 성과평가 지표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함
- [조광희 교수, 동국대] 균형예산을 목표로 하는 현 예산구조에서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성과평가에 정확히 부합하는 제도는 아님을 전제하고 사업평가 대상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발생주의 성과평가의 신뢰성, 타당성 확보가 중요하며 ‘관람객 수’와 같은 현 성과지표가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도구로서 신뢰성이 있는지 검토 필요성을 제안함
- [정창훈 교수, 인하대] 재정사업자율평가는 대부분 정성적 평가로 원가정보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업평가는 세부사업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근본적으로 예산편성구조의 세부사업단위로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함. 또한 국회·고위 공직자의 원가정보(발생주의)에 대한 관심이 아직 크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3 한국회계학회 2017 하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세션’ 결과

국가회계분야 연구성과물 확산 및 전문가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한국회계학회 2017 하계학술대회’에서 ‘국가회계재정통계세션’을 운영함

가. 개요

1. 일 시 : '17.6.16.(금) 10:45~12:15
2. 장 소 :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베니스룸
3. 주 최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세션)

〈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김이배(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발표 1] 국가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개선

-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수선유지비를 중심으로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

[발표 2] 발생주의 재정통계와 재정관리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

[발표 3] OECD 가입국의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현황 분석

(임정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문연구원)

[발표 4] 불용액 현황분석 그리고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의 관계분석

(배기수, 충북대학교 교수)

[토론] 자유토론



〈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6.16),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6월 15일에서 6월 16일까지 2일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 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국가회계재정통계 세션을 운영하였다. 동 세션은 박성환 교수, 박운진 팀장, 임정혁 연구원, 배기수 교수가 발표를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한밭대학교 박성환 교수는 사회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수선유지·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기반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등의 표시 및 공시에 관한 국가회계 예규의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어서 재정통계팀의 박운진 팀장은 「발생주의 재정통계와 재정관리」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발표를 통해 정부에서 활용하는 현행 재정지표의 현황과 한계점을 검토하였으며, 국가의 신용위험과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유용성을 검증함으로써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거시경제 설명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발생주의 재정통계와 재정관리」를 바탕으로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통한 재정지표 사례발굴 등 재정통계의 활용과 확산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자인 국가회계팀의 임정혁 연구원은 「OECD 가입국의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현황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OECD가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의 중간 성과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OECD 가입국의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사례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발표는 총 14개의 설문대상 국가 중 회신이 완료된 6개국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각국이 주로 어떠한 용도로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였는지를 밝히고 있다.

마지막 발표자인 충북대학교 배기수 교수는 세출 불용·이월액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용·이월액과 발생주의 재무정보와의 관계성에 대해 모형 및 가설을 검증한 중간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정부회계분야 연구는 특히 재정, 예산, 행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나 인력풀이 부족한 상황임. 학자들의 많은 참여 필요. 또한, 국가의 투명성과 회계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인식 확산 필요

- 두 번째 주제인 국채 이자율과 국가 재무정보 간의 연관성 분석은 국내에서 최초로 나온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음
 - 네 번째 주제는 정부가 불용액을 '0'으로 만드는 데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국회나 예결위 위원들이 재무정보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추진한 연구임
- (장지인 원장, 한국회계기준원) 불용액 관리방안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요한 이슈로 적절한 예산 편성에 도움을 주는 데 발생주의 재무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
-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들이 과다하게 편성한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삭감하고 불용액을 감소시키는 데 관심이 많음
 - 불용액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국가재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함. 예산편성이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 프로세스에 의해 집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용액을 재정정보와 연계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음
 -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데 유용한 정보, 기술이나 방법론을 제공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국회 등에서 결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현 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손성규 회장, 한국회계학회) 중앙정부 회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회계학 교수님의 전문성으로 연구해야 할 영역이 많으므로 정부회계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
- (전규안 교수, 송실대학교) 정부회계분야는 새롭게 익혀서 연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임. 2~3년 전보다는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으니 계속 이렇게 노력하면 결실이 있을 것임

국가회계재정통계 세션 전체 주제에 관한 자유토론에서는 발생주의 재무정보가 국회의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정부회계 분야에 대한 학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토론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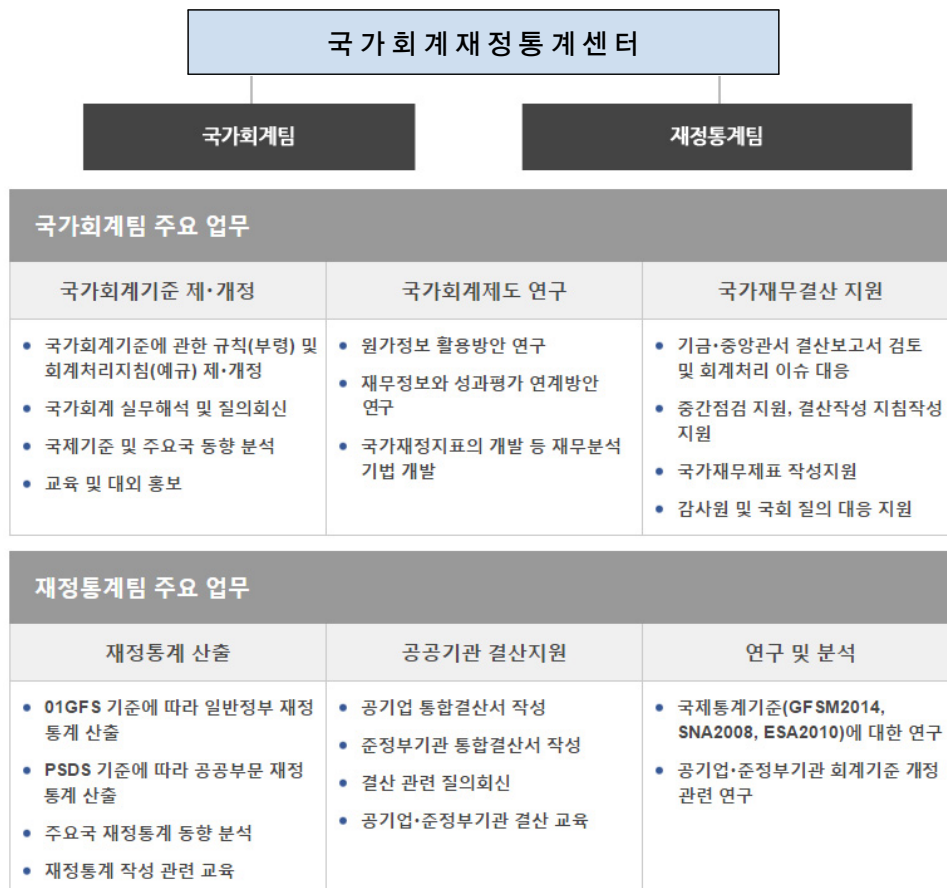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한국회계학회에 위탁한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에 관한 연구 (’16.12.26.~4.25., 4개월)」가 최종 완료되었다. 이 연구는 2014년 국가회계 체계개편 시 이루어진 형식적 개편을 넘어 내용적 선진화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용역 결과, 센터에서 분석한 현행 22개 국가회계예규의 개정소요사항을 바탕으로 개정필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기준개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성적 요소를 감안하여 5개년 업무 수행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06 공지사항

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7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우리 센터에서는 2017년도 수행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 받은 주제는 자체 심의를 통해 기획과제, 정부수탁과제, 위탁과제 등으로 선정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제 제안과 관련한 센터의 팀별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 의견제안 코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뉴스레터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에서는 뉴스레터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49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의 기준과 관련법령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편 집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전체 총괄)

김은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표), <http://gafsc.kipf.re.kr>



전/략/목/표

■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
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 방안 마련
체계적인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수행

■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원가정보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지표 개발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자료 제공

■ 국내외 회계환경변화 대응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공공부문(지방, 공공기관) 회계환경 동향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공감대 형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Homepage <http://gafsc.kipf.re.kr>

2017년 7월 15일 발행